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정규섭(관동대학교 북한학과)

1. 서론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 시킨다는 외교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넓히게된 이유는 미·중국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활용하여 남한과 외교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군사력 강화정책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상품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확대한 결과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국과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서 나타나듯이 외교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이 기간에 걸쳐 북한 외교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 심사자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린다.

관계개선과 서방으로부터 플랜트 수입 및 차관도입 등 경제관계 확대, 분단 후 처음 남한 당국과의 대화, 유엔주재 상주대표부 개설과 유엔산하기구 가입, 미국에 대한 직접접촉 제의, 비동맹운동과 77그룹 가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70년대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 확고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1972년 7월 4일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주장해 왔던 원칙이었다는 점과 1975년 북한이 비동맹운동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남한에 대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국제원유가 상승, 운송수단 결여 등으로 서방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난관에 처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딪혔으며,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저지른 결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는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이 전개한 외교와 대남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남정책은 구분되는 사안이나, 이 글에서는 대외정책의 범주에 이 둘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의 방향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보고문을 통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새로운 통일방안과 함께 외교정책 이념을 ‘자주·친선·평화’로 체계화하였다. 이후 1980년대 북한 외교의 주요 측면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에서 나타나듯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1980년 후반 사회주의권의 체제변

동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제6차 당대회에서 표명된 내용을 분석하고, 북한이 제시한 ‘친선과 평화’라는 외교정책 이념을 중심으로 1980년대 북한이 전개한 외교와 대남정책의 주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주’라는 외교정책 이념의 구체적 표출을 논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주’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적 수사 또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대외개방에 대한 북한의 논리와 정책, 그리고 세계질서 변화에 따라 북한이 어떠한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외교정책 이념의 체계화와 정책 전개양상

1) 제6차 당대회 : 외교정책 이념과 통일방안의 체계화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반제자주역량의 단결 강화,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단결,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와 연대성 제고를 역설하는 동시에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어서 김일성은 “자주, 친선, 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입니다”¹⁾라고 표명하였다. 이 내용에서 ‘자주·친선·평화’가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체계화되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1』(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1), 65~66쪽.

이 3가지 이념의 내용을 김일성의 보고문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첫째, ‘자주’에 대한 설명은 외교정책의 독자적인 결정, 자신의 판단과 주권에 따른 외교활동 전개, 완전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의한 대외관계 발전, 자신의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국제관계 문제 해결, 외부로부터 민족이익의 침해와 내정간섭 및 타국에의 맹목적 추종 배제, 타국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존중 등이다.

둘째, ‘친선’의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가, 제3세계 순이며, 그 다음이 자본주의 국가 및 전제조건하에서 미국과의 친선도모이고, 이에 덧붙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도 표명되었다. 특히 김일성은 미국이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김일성은 ‘평화’라는 외교정책 이념을 설명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비난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를 위해서 군사블록의 해체, 외국에 있는 군사기지 철폐, 외국군대 철수, 비핵지대와 평화지대 창설, 신형세력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은 국가수립 이후 북한이 전개해 온 외교정책 노선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라는 북한 외교정책 이념은 1966년 10월 당 대표자회에서 수립된 ‘자주노선’을 재천명한 것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제1원칙으로 지속되어 왔다. ‘친선’이라는 이념은 북한이 실제 전개한 외교활동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북한이 추구해 온 정책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친선이라는 내용 가운데 미국과의 친선관계 도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점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하겠다고 제시한 점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화’라는 이념은 북한이 국가수립

이후 계속하여 ‘평화에호국가’임을 표방한 것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 보고문에 나타난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이전의 어떤 논리보다도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한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은 김일성이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 그 순서를 ‘자주·평화·친선’으로 바꿔 제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제6차 당대회에서의 보고를 통해 김일성은 북한 외교정책 이념을 체계화시킨 것과 함께 통일방안도 구체화시켰다.²⁾ 김일성은 이 보고문을 통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일3원칙으로 설정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리하에 김일성은 사상·제도를 상호 인정·용납한 기초 위에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고, 통일정부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를 수립하여 통일을 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 및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고, 연방국가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하며, 전체 인민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부합하는 10가지 시정방침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³⁾ 이와 함께 김일성은 연방제를 실현

2) 위의 책, 52~61쪽.

3) 10가지 시정방침의 내용은 첫째,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 실시, 둘째,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

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권의 교체, 보안법 폐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일방안이 기존의 방안과 다른 점은 첫째, 연방형식의 통일 국가 수립방안은 기존 방안과 달리 하나의 민족국가 내에 두 제도와 두 정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둘째, 남북자유총선거 방안과 다른 점은 남북 총선거라는 방법이 아니라 남북이 협상과 정치적 합작을 통해 연방국가를 수립하여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연방제와 다른 점은 과도적 대책이 아니고 국가구조상 연방제를 통일국가로 간주한 것이다.⁴⁾

2) '친선'과 외교정책 전개양상

'친선'이라는 외교정책 이념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의미하지만,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은 사

결의 도모, 셋째, 남북 경제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넷째,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남북의 교류와 협조 실현, 과학기술,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 발전, 다섯째, 남북의 교통과 체신 연결, 전국에서 교통, 체신수단의 자유이용 보장, 여섯째,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과 전체 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 증진, 일곱째,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민족연합군 조직,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조보위, 여덟째,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보호, 아홉째, 통일 이전에 타국과 체결한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 양 지역정부의 대외활동 통일, 조절, 열째, 세계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 발전, 평화 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위의 책, 57~60쪽; Young C. Kim, "North Korea in 1980 : The Son also Rises", *Asian Survey*, vol. XXI, no. 1(January, 1981), pp. 115~117.

- 4) 북한은 1949년 6월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의 선언과 1950년 6월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 1959년 10월 26일 최고 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남일 부수상이 행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보고" 등을 통하여 "전조선적인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실현을 제의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하여 남북 총선거 불가능시 통일 이전의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바 있다.

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 국가들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프랑스와 1984년 12월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승격시키고 1985년 10월에는 양국간에 연락대표부를 설치한 것과 1984년 1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외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대사회주의권 외교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고위대표단의 상호방문 및 경제·문화·군사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였다. 1980년 이후 김일성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방문은 빈번히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1982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987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1984년 11월에는 비공식 방문하였다.⁵⁾ 1982년의 방문기간 김일성은 지방도시 성도·서안을, 1987년 방문기간에는 천진을 방문하였다.⁶⁾ 또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래 외국방문으로는 처음 1983년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의 빈번한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 중국의 대외개방, 경제개혁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학습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5) 『조선중앙년감 1983』, 211~213쪽; 『조선중앙년감 1988』, 224~225쪽;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서울 : 법문사, 1985), 184쪽;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4 : 'The Hermit Kingdom' Turns Outward!", *Asian Survey*, vol. XXV, no. 1(January 1985), p. 72 ; B.C. Koh, "North Korea in 1987 : Launching a New Seven-Year Plan", *Asian Survey*, vol. XXVII, no. 1(January, 1988), pp. 44~45.

6) 북한은 김일성의 1987년의 중국방문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의 중국방문은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공고히 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또 하나의 획기적 사변으로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88』, 225쪽.

7) 김정일의 중국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7), 206~210쪽 참조.

한편 김일성은 1984년 5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소련을 비롯하여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김일성의 소련과 동유럽 방문의 목적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보고 배우며 이들과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시키려는 것이었다.⁸⁾ 김일성의 소련방문은 공식적으로는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 김일성이 참석한 이후 23년만의 일이다.⁹⁾

1984년 7월 6일부터 9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9차 회의가 개최되어 북한 대표단의 소련·동유럽국가 방문결과를 논의하였다. 이 전원회의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방문의의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의 시위,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에 대한 기여, 국제적 연대성의 강화계기, 경제 및 과학기술적 교류와 협조의 확대발전의 기초확립 등으로 지적하였다.¹⁰⁾ 북한대표단은 경제분야에서 방문기간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동력공업,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기계공업, 채취공업, 최신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교류와 합작, 기술협조를 실현하며 무역을 늘일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합의를 이룩한” 것으로 알려졌다.¹¹⁾ 결국 위의 지적처럼 북한대표단의 방문목적은 경

8) 『조선중앙년감 1985』, 113쪽 : V. Andreyev and V. Osipov, “The DPRK : Years of Struggle and Construction”, *Far Eastern Affairs*, vol. 46, no. 4(1985), pp. 51~52.

9) 1984년 5월 김일성의 소련방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IV(January/February, 1985), pp. 4~5; O. Davydov and V. Mikheyev, “DPRK’s Foreign Policy and Relations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vol. 55, no. 5(1987), p.33 참조.

10) 『조선중앙년감 1985』, 112~116쪽.

11) “전원회의는 당 및 국가대표단이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경제 및 과학기술적 협조를 급속히 확대발전시킬 데 대하여 합의한 것은 이번 방문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며 이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과 대외무역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만족스럽게

제분야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시키려는 것이었다.¹²⁾

1986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김일성은 재차 소련을 방문했다.¹³⁾ 김일성의 소련 방문을 통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최신무기를 획득하였고, 그 대가로 북한 영공의 군사적 이용권을 소련에 제공함으로써 소련과의 유대강화를 도모하였다.¹⁴⁾ 1988년 6월에 김일성은 몽고를 1956년 이후 최초로 방문하였다.¹⁵⁾

한편 북한의 대중·소관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1985년에 있었다. 북한은 1965년 이래 중지해왔던 소련의 북한 해방기념식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기념식을 거행했다. 1985년 8월 14일 ‘조국해방 40돐 중앙 경축보고대회’에는 소련의 정치국원이며 내각 제1부수상인 알리에프(G. A. Aliyev)와 국방제1차관인 페트로프(V. I. Petrov) 원수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부대표단, 군사대표단이 참석했다.¹⁶⁾ 10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35주년 기념식에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며 부수상인 이봉(李鳳)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정부대표단과 중국인민 친선대표단, 중국인민지원

지적하였다.” 위의 책, 116쪽.

- 12)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전일춘,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제528호(1986년 4월), 51~52쪽 참조
- 13) 『조선중앙년감 1987』, 288~289쪽; Dae-Sook Suh, “North Korea in 1986 : Strengthening the Soviet Connection”, *Asian Survey*, vol. XXVII, no. 1(January 1987), p. 57.
- 14)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 백산서당, 2002), 158쪽. 김일성의 방소에 대해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소련방문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조소친선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발전 시키는데서 특별한 사변으로 되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기술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7』, 289쪽.
- 15) B. C. Koh, “North Korea in 1988 : The Fortieth Anniversary”, *Asian Survey*, vol. XXIV, no. 1(January, 1989), p. 44.
- 16) M. Ukrainsev, “The Soviet Union’s Cooperation with Asian Socialist Nations and Kampuchea”, *Far Eastern Affairs*, vol. 47, no. 1(1986), p. 54.

군 대표단 등이 북한을 방문했다.¹⁷⁾ 이에 대해 북한은 “특히 조국해방 40돐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35돐을 계기로 쏘련,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친선’이라는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의 두번째 대상인 비동맹국가와 제3세계에 대한 북한의 외교는 비동맹운동의 분열에 따라 비동맹운동의 단결을 호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초청·방문외교, 국제회의 유치 등의 양태를 보였다. 북한은 1980년 6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소집하여 비동맹운동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다음 여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빨럭불가담의 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둘째로, 제국주의자들의 분열, 리간, 쟁탈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셋째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넷째로,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계속 적극적인 지원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시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여섯째로, 당면하여 빨럭불가담 나라들의 외교부장 비상회의를 열고 현정세를 분석평가하며 빨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¹⁸⁾

17) Dae-Sook Suh,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291; 『조선중앙년감 1986』, 170, 143쪽. 조국해방 40돐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 정무원 총리는 “우리 인민은 해방자, 원조자로서의 쏘련의 역할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형제적 쏘련인민을 믿음직한 혁명전우로, 계급적 동맹자로 가지고 있는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8) 『조선중앙년감 1981』, 112~116쪽;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3』(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477~478쪽.

이 내용에서 북한은 비동맹운동이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외교정책 전반에 심각한 손실이 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비동맹국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각종 대표단을 파견하고, 국가수반들을 빈번히 초청하여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초청·방문 외교와 함께 북한은 비동맹운동에 관련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1981년 8월 ‘식량 및 농업증산에 관한 빨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김일성은 9월 26일의 환영 연회에서 “빨럭불가담 나라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력갱생하여 농업 문제를 해결하자”는 연설을 행했다.¹⁹⁾ 이후 북한은 1983년 7월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와 9월에는 ‘제1차 빨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 회의’를 평양에 유치했으며,²⁰⁾ 1984년 6월에는 ‘빨럭불가담 나라 식량 및 농업부문 조절국의 관개전문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1986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비동맹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입장을 정리하기도 하였다.²¹⁾ 또한 비동맹 각료급 특별회의가 1987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남남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38개항의 평양선언과 59개항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²²⁾

19) 『조선중앙년감 1982』, 117쪽; Rin-Sup Shinn, “North Korea in 1981 : First Year for De Facto Successor Kim Jong Il”, *Asian Survey*, vol. XXII, no. 1 (January, 1982), p. 105; V. Mikheyev and V. Tsupikov, “The DPRK’s Role in the Nonaligned Movement”, *Far Eastern Affairs*, vol. 59, no. 3(1988), p. 93.

20) 세계기자대회에는 118개국, 17개 국제기구의 169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고,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에는 75개 국가와 민족해방단체 대표단, 20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했다. 『조선중앙년감 1984』, 204쪽; Young Whan Kihl, “North Korea in 1983 : 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Asian Survey*, vol. XXIV, no. 1(January, 1984), p. 109.

21) 『조선중앙년감 1987』, 179~182쪽 참조.

1988년에도 비동맹관계 국제회의가 3차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3) '평화'와 대남정책 전개양상

제6차 당대회시 보고문을 통하여 김일성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따라 북한은 1980년 11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 제의와 1981년 8월 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제의 등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경주하였다.²³⁾

그러나 북한은 1983년 10월 랭군폭파사건을 자행하여 남한 대통령 일행의 암살을 기도한 직후인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 개최,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하는 한편, 3월 30일에는 올림픽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대표단 회담을 제의하였다.²⁴⁾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회를 통하여 한국의 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쌍방 적십자사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다.²⁵⁾ 이를 계기로 다방면에 걸친 남북대화·접촉이 재개되었으나,²⁶⁾ 북한이 1986년

22) 이 회의에는 87개국, 14개 국제 및지역기구, 2개 민족해방단체 등 103개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일성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는 제목의 축하연설을 하였다. 김일성의 연설 전문은 『조선중앙년감 1988』, 17~22쪽 참조.

23) 전금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37쪽.

24) 『조선중앙년감 1985』, 122~123쪽.

25) 이에 대해 북한은 “40년의 분단력사에서 처음으로 5만 석의 쌀과 10만 톤의 세멘트, 50만 메터의 천과 많은 의약품들을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594쪽.

26) 1984년 11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경제분야 회담이 개최되어

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 1986년 1월 20일 모든 남북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재차 전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북남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제의,²⁷⁾ 1987년 7월 23일 ‘조선반도에서 단계적 다국적 무력감축 협상’ 제의²⁸⁾ 등 평화공세를 취하는 한편, 1987년 11월 남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를 미얀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킨 테러를 감행하였다. 평화문제에 관해 북한은 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이 제의에서 통일 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과 함께 포괄적인 평화방안으로 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1985년 11월까지 5차례 진행되었고, 남북적십자 본 회담은 중단 12년 만인 1985년 5월 재개되어 12월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특히 1985년 9월 20일에는 151명으로 구성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라는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인적 교류가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1985년 7월과 9월에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2차례 이루어졌으며, 동년 10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재하에 남북체육회담이 한차례 개최되기도 하였다.

27) 김일성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이 회담에서의 협의사항으로는 ① 비방중상 중지 및 다방면적인 합작·교류의 실현을 통한 민족적 유대 도모 등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대책, ② 무력축소,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 긴장완화 조치, ③ 중립국감독위원회의의 권능 제고 대책 및 비무장지대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중립국감시군 조직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중앙년감 1987』, 104쪽.

28) 북한은 1987년 7월 23일 정부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감축협상’을 제의했으며,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병력의 단계별 축소 후 1992년부터 10만명 이하의 병력 유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철수, 군사기지 철폐, 군축현황의 상호통지, 평화지대 건설, 다국적군축협상 제안 등이다. 『조선중앙년감 1988』, 243쪽.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시하였고, ②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그리고 고위급 정치회담 등을 제시하였다.²⁹⁾

3. 대외개방의 논리와 정책

김일성은 제6차 당대회 보고문을 통해 대외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수출품생산의 확장, 수출액의 제고, 대외무역의 발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의 확장을 모색하였는 바, 1980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차 전원회의와 198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대외무역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대외무역의 폭의 확장, 무역기관의 역할과 책임성의 제고, 수출품생산의 확대” 등을 지적하였다.³⁰⁾ 이와 함께 북한은 자립경제가 결코 폐쇄적인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협력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³¹⁾

29) 『조선중앙년감 1989』, 150~154쪽.

30) 『조선중앙년감 1984』, 120쪽.

31) 1982년 3월 31일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한편 북한은 1984년 1월 26일의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을 채택하여 대외무역 확대 정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³²⁾ 이 결정을 통해 북한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외경제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외교관계도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한편, 외교관계가 없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교역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경제합작과 기술협조의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³³⁾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며 실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1984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대외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과업을 논의하였다.³⁴⁾ 김일성은 1985년 6월 9일 『세까지

아닙니다.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 신흥세력 나라들이 서로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83』, 144쪽.

32) 『조선중앙년감 1985』, 124쪽; 이 최고인민회의 결정의 전문은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IV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589~597쪽 참조.

33) Young Whan Kihl,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 510(April 1986), pp. 164~165. 합영법의 전문은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년~1985년』(서울: 북한연구소, 1986), 113~114쪽 참조. 합영법에 대한 북한의 해설은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제6호(1985), 41~46쪽 참조.

34) 이 회의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한 내용은 “유색금속, 마그네슘, 시멘트,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 물자 수출에 힘을 넣으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출품생산을 적극 늘이고 수출에서 가공품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世界)』지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합영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경제합작과 교류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나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합영법이 발표된 다음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것을 새롭게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 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³⁵⁾

위의 김일성의 언급에서 북한이 합영법의 제정을 매우 중시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교류, 합작을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1985년 3월에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대외개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³⁶⁾ 1986년 8월 8일에는 조총련 합영사업연구회와 북한의 합영

와 협동품을 먼저 대주어 수출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남남협조의 정신에 따라 합작을 비롯한 경제협조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조선중앙년감 1985』, 120쪽.

35) 『조선중앙년감 1986』, 18쪽.

36)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December 1988), pp. 1272 ~ 1273; 박동

사업 준비위원회 간에 조선국제합영총사를 설립하기 위한 합의를 조인하였으며,³⁷⁾ 이를 통해 북한은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3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경제합작, 합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³⁸⁾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기념식에서의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³⁹⁾라고 말하여 대외무역의 확대, 합영, 합작사업의 확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1988년 11월 26일 정무원내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전담부서도 제도적으로 구비하였다.⁴⁰⁾

이와 같이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 대외무역의 확장과 경제합작, 합영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게 된 근본원인은 계획경제,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계획의 목표인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했다. 이와 함께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이후 북한은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을 통해 후계체제를 공고화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방정책은 북한의 정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철, “북한의 대외개방 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 (1989 가을), 111 쪽;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삼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257~258쪽 참조.

37)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pp. 1273~1277.

38)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법령 전문은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IV집, 910~924쪽 참조.

39) 『조선중앙년감 1989』, 24쪽.

40) 『내외통신 종합판 38』(1989), 321쪽.

그러나 합영법 제정이후 북한의 합작실적은 1985년 6건, 1986년 8건, 1987년 12건, 1988년 8건, 1989년 19건으로 총 53건에 불과하듯이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였다.⁴¹⁾ 더욱이 북한은 1987년 8월 140개 서방 채권은행단에 의해 채무불이행국가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⁴²⁾ 이후부터 조총련을 제외하고 북한에 진출하려는 서방기업은 거의 없게 되었다. 다만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대한 논리는 이미 세워졌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⁴³⁾ 결국 북한은 유일체제의 유지와 대외개방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4. 세계질서 변화와 정책전환의 모색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19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여 소련이 처한 사회·정치·경제적 위기를 변혁시키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은 처음에는 경제개혁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전반의 민주화라는 정치개혁으로 확산되었으며, 외교적으로도 동맹국들의 정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자율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고

41) 구체적인 합작실적 내용은 박동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추세와 전망”, 100~136쪽; 연하정,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258~260쪽 참조.

42) Koh, “North Korea in 1987”, p. 64; Koh, “North Korea in 1988”, pp.40~41.

43)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달현 대외경제위원장 겸 무역부장은 1989년 9월 호 『근로자』에 게재한 논문을 통하여 “합영과 합작은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는 이미 조직된 합영공장들과 합영회사들의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더욱 발전시키며 대외건설을 적극 벌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제 569호 (1989년 9월), 64쪽.

결국 정치적인 측면에서 1989년에 이르러 대부분 다당제 도입, 자유총선거, 궁극적으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종식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1989년 혁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동독은 1989년 11월 10일 국경을 개방하여 독일분단의 장벽이 와해되었다.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과 연계되어 세계질서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1989년 12월 몰타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규정하였던 동서냉전이 종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성과는 사회주의국가들의 88서울 올림픽 대거 참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계질서·동북아질서의 변화는 김일성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1)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인식

첫째,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붕괴현상을 역사발전의 기본 흐름에서 볼 때 부분적·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북한은 동유럽국가들의 급격한 정치변동이 초래되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⁴⁴⁾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에서 직접 지칭하

44) 김정일은 1988년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행한 담화에서 “현시기 인류의 자주화사업은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역전시켜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결탁하여 연합된 세력으로 세계자주력량을 반대해 나가고 있으며 반제자주의 핵심력량인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탁탈을 강화하기 위

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변화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본주의 길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반력사적이고 반인민적인 책동이며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인류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것은 력사의 어길 수 없는 법칙이며 오직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리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 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주의는 세계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혁명적 기치는 아세아와 구라파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확고히 고수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온갖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 전진하며 전세계적 범위에서 완전히 승리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가치를 궁지높이 추켜들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튼튼히 지켜나갈 것입니다.⁴⁵⁾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양상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고, 사회주의만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고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자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⁴⁶⁾

하여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혁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그 원인이 제국주의에 있다고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근로자』, 제565호(1989년 5월), 4쪽.

45) 『로동신문』, 1989년 1월 1일.

46) 정동운,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 『근로자』, 제566호(1989년 6월), 95쪽.

동유럽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근로자』에 게재된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사회주의적 소동을 철저히 짓부시자”는 제하의 논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설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국주의자들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군사적 침략과 함께 정치사상적 공세, 사상문화적 침투강화, 경제적 침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열책동 등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이러한 ‘반사회주의 소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주의역량의 단결 강화, 당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북한은 동유럽의 정치개혁에 대해 “오늘 어떤 사회주의 나라에서와 같이 혁명적 원칙을 저버리고 자기 나라에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혼드는 딸라주머니에 현혹되어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당이 독자적인 주권과 자주적인 신념을 확고히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이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정세’에 대처하는 방법이 곧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방침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은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 주체사상의 교양강화, 사대주의·교조주의·수정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개 등이다.⁴⁸⁾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변화양상은

47)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사회주의 소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근로자』, 제567호(1987년 7월), 3~9쪽 참조.

48) 고크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1989년 10월), 15~20쪽. 이 글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되돌려 세워 온 세계를 황색세계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화하려는 악랄한 반공전략”인 ‘평화적 이행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변혁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한국의 대사회주의권 접근을 천명한 ‘7.7 선언’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반응은 1988년 7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의 성명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 성명에서 “우리는 <7.7특별선언>이 <두개 조선>을 위한 분렬주의적 <단계론>으로 시작되고 <단계론>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교차접촉>으로 결속되고 있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7.7선언’은 분단의 고착화와 두개의 조선을 합법화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⁴⁹⁾ 이후 북한은 서울 올림픽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⁵⁰⁾

북한은 북방정책을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두개 조선>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⁵¹⁾ “결국 사회주의 나라들에 뚫고 들어가 <교차승인>, <유엔가입>의 길을 닦고 궁극에 가서는 <두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 군사

49) 『로동신문』, 1988년 7월 12일.

50) 이 시기 북한이 북방정책을 비난하고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정치논총』, 제29집 2호(1989), 135~137쪽 참조.

51) “그들이 미일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들고 나온 이른바 <북방정책>은 <교차승인>과 <유엔가입>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여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갈라놓으려는 영구분렬책동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추구하고 나선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용납하지 않는 <두개 조선>을 외부의 힘을 빌어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며 남조선을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핵전초기지로 영원히 내맡기려는 매국매족적 책동이다.” 최성익, “북남대화는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근로자』, 제561호(1989년 1월), 87쪽.

기지로 내맡기려는 분렬영구화정책, 매국배족정책이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반공대결정책”이라고 규정하였다.⁵²⁾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처하는 북한의 입장은 북방정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저지파탄시켜야 하고, 이에 사회주의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북방정책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셔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서 그 핵심은 북방정책이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두 개의 조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셋째,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1989년 10월 미·소 몰타 정상회담 이후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창출되기 시작하였으나, 북한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상태에 있다고 인식하는 한편, 제국주의 세력은 존속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우위를 통해 세계제패의 야망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⁵³⁾

52) 김태화, “<북방정책>은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반민족적 책동”, 『근로자』, 제565호(1989년 5월), 79, 83쪽.

53)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냉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2) 정책전환의 모색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계의 유지에 매진하였다. 북한은 1989년 12월 20일 재외 30국 대사를 긴급소집하여 대처방안을 논의하였고, 1989년 7월 헝가리 유학생 120명을 전원 철수시킨 것을 시발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유학중이거나 기술훈련중인 인원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⁴⁾ 또한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과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이 맞물려 이루어진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인 비난과 대사 소환 등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면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였다.⁵⁵⁾ 그러나 북한은 대사회주의권 외교정책의 측면에서 1989년 12월 27일 루마니아의 임시정부를 승인하여 관계 재정립을 도모하면서 기존 관계의 유지에 노력하였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에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양태를 보였다. 북한은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사태에 대해 1989년 7월 1일자 『로동신문』 논설 “중국공산당 창건 68돐”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중국공산당의 무력진압 조치를 지지한 이래 양국은 유대는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중·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1989년 4월 조자양(趙紫陽)의 방북, 1989년 11월 김일성의 방중 등을 통해 긴밀히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기존 관계 유지와 대중관

54) 『동아일보』, 1989년 12월 16일; 1990년 1월 5일.

55) 예를 들어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에 대해 1988년 2월 2일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를 비난하고, 대사의 소환과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하였다. 한국·폴란드 수교에 대해 북한은 대사의 소환과 『로동신문』, 11월 3일자 논평을 통해 폴란드를 비난하였다.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 동향』, 제92호(1989.2), 47~50쪽; 제101호(1989.11), 32~33쪽.

계 긴밀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남북공존 모색, 대미·일 접근,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 모색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은 1988년 12월 28일 한국정부가 제의한 총리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1989년 2월 예비회담에 호응하였다. 김일성은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존의 원칙에서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⁵⁶⁾라고 언급하여 ‘남북 공존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둘째, 대미·일 접근이라는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1988년 12월 북경에서 미국과 정무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였다. 한편 1989년 3월 31일 다케시다(竹下登) 일본 총리는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국호를 사용하여 대북한 관계개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김일성은 1989년 4월 4일 다나베(田邊誠) 전사회당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비우호적 태도를 시정한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북한과 일본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전개하였다.

셋째,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대외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1989년 1월 스위스 다보스시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지도자회의에 북한은 최초로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⁵⁷⁾ 1989년 4월에는 북한과 조총련이 공동운영하는 ‘조선합영 은행’이 개설되었다.⁵⁸⁾ 북한은 1989년 7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북경지사를 통해

56)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29쪽.

57) 『내외통신 종합판 39』(1989), 185쪽.

58)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동향』, 제101호, 20~21쪽.

83개 합작투자유치 희망사업의 내역을 공개하였다.

5. 결론

1980년대의 북한 외교와 대남정책을 평가하면 우선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통일문제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에게 선수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외교정책 이념을 ‘자주, 친선, 평화’로 체계화한 것 역시 정책의 명쾌한 논리정리로 평가된다.

제6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 이전까지 북한이 전개한 외교와 대남정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북한의 대 사회주의권 외교, 특히 중·소와의 관계긴밀화는 성공적으로 유지되었으며, 북한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북한이 제6차 당대회에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의욕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의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테러에 대해 미국이 1988년 1월부터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린 이후 매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1980년대에 걸쳐 북한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중을 둔 대제3세계외교가 비동맹운동의 실효성 상실에 따라 빛을 발하지 못하고, 북한 외교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주었다. 1980년대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분단 이후 두 번째로 여러 분야의 남북대화에 호응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주력하지 않은 채 비핵·평화 등 선전적인 측면만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사회주의국가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경쟁

에서 타격을 받아야 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을 모방하여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대외개방의 논리를 세우고 실제 정책추진을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관계증진에 따라 북한은 외교정책을 재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1989년 혁명'으로 불리운 사회주의권의 체제변동은 유일체제를 고수하고 있던 북한에게 체제유지에 위협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80년대 후반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기존 관계 유지에 주력하면서 남북공존 모색, 대미·일 접근,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 모색 등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정책전환은 1990년대에 들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추진되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고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1989년 10월).
- 김달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제569호(1989년 9월).
-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1985년 제6호.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80.10.10), 『조선중앙년감 1981』.
- ,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1986.12.30), 『조선중앙년감 1987』.
- ,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 완수하자”(1988.9.8), 『조선중앙년감 1989』.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 『조선중앙년감 1982』.
- ,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근로자』, 제565호(1989년 5월).
- 김태화, “<북방정책>은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반민족적 책동”, 『근로자』, 제565호(1989년 5월).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3』(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 전금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전일춘,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제528호(1986년 4월).
- 정동운,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 『근로자』, 제566호(1989년 6월).
-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사회주의 소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근로자』, 제567호(1987년 7월).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1-198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1989).
- 최성익, “북남대화는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한다”, 『근로자』, 제561호(1989년 1월).
-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2차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 동향』, 제92호(1989.2).
- ,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IV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백산서당, 2002).
- 박동철, “북한의 대외개방 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1989 가을).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년~1985년』(서울: 북한연구소, 1986).
- 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정치논총』 제29집 2호(1989).
-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법문사, 1985).
- 연하청,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화정책”,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 『북한 및 공산권 동향』, 제101호(1989.11).
- 『내외통신 종합판 38』(1989).
- 『내외통신 종합판 39』(1989).
- Andreyev V. and Osipov, V., “The DPRK: Years of Struggle and Construction”, *Far Eastern Affairs*, vol. 46, no. 4(1985).

- Davydov, O. and Mikheyev, V., "DPRK's Foreign Policy and Relations in the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vol. 55, no. 5(1987).
- Kihl, Young Whan, "North Korea in 1984 : 'The Hermit Kingdom' Turns Outward!", *Asian Survey*, vol. XXV, no. 1(January, 1985).
- , "North Korea in 1983 : Transforming 'The Hermit Kingdom'?", *Asian Survey*, vol. XXIV, no. 1(January, 1984).
- , "North Korea's New Pragmatism", *Current History*, vol. 85, no.510(April 1986), pp. 164~165.
- Kim, Young C., "North Korea in 1980 : The Son also Rises", *Asian Survey*, vol. XXI, no. 1(January, 1981).
- ,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XIV (January/February, 1985).
- Koh, B. C., "North Korea in 1987 : Launching a New Seven-Year Plan", *Asian Survey*, vol. XXVII, no. 1(January, 1988).
- , "North Korea in 1988 : The Fortieth Anniversary", *Asian Survey*, vol. XXIV, no. 1(January, 1989).
-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December, 1988).
- Mikheyev, V. and Tsupikov, V., "The DPRK's Role in the Nonaligned Movement", *Far Eastern Affairs*, vol. 59, no. 3(1988).
- Shinn, Rin-Sup, "North Korea in 1981 : First Year for De Facto Successor Kim Jong Il", *Asian Survey*, vol. XXII, no. 1(January, 1982).
- Suh, Dae-Sook, "North Korea in 1986 : Strengthening the Soviet Connection", *Asian Survey*, vol. XXVII, no. 1(January, 1987).
- ,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Ukrainsev, M., "The Soviet Union's Cooperation with Asian Socialist Nations and Kampuchea", *Far Eastern Affairs*, vol. 47, no. 1(1986).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1980s

Kyu Sup Chung(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key features of North Korean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during the 1980s.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North Korea took initiatives in its inter-Korean policies by adopting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as a unification model at the Sixth Party Congress in October 1980. Furthermore, Kim Il Sung declared three principles of foreign policy in his report to the Congress, i.e. "independence, fraternity, and peace," which constituted cornerstones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onwards. However, a thorny path North Korea had to pass in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inciples, particularly when Soviet blocs collapsed at the end of 1980s. This paper explores North Korean logics and strategies of out-door policy and their twisted implementations in the face of skepticism of Western countries and reforms in the socialist bloc.

A balance sheet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drafted on the basis of officially stated targets and a brief historical review of its

performance shows that North Korea had a moderate success in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socialist countries, particularly with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1980s. North Korea appeared less successful in its one of high concerned area, the Third World, because non-alignment movement itself was losing its political influe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lthough North Korea launched a test to develop a North Korean version of out-door policy during this period, its achievement appeared to be ignorable. It was included in the list of the terror-supporting countries since after KAL incident in November 1987, and the arrangement constituted a barrier to already-reluctant Western investors.

Another failure was recorded i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lthough it took initiatives in 1980, North Korea repeated propaganda-oriented approaches, which turned out to be a failure when socialist countries took part in Seoul Olympics in 1988. Since the Olympics, rapproch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became apparent, which soon followed by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e 'Revolution of 1989'.

Upon these successes and failures, North Korea had to adjust its policies in the late 1980s : coexistence with South Korea, appeasement towards the U.S. and Japan, and a refined version of out-door policy. Such changes in policies reflected North Korean efforts to meet challenges of international order, and were to be embodied in the 1990s.

Key Words :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three principles of foreign policy, out-door policy,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and North Korea